

마우로 기엔 교수

■ 마우로 기엔(Mauro Guillen)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는 예일대와 스페인 UOA에서 사회학과 정치경제학으로 각각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기술원에서 사회경제학 회원조직 글로벌화 및 혁신의 불평등한 확산에 대한 연구로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지** 금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나 공황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 시스템과 구조는 물론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입안, 신흥국의 경제 비중 등 모두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1년 세계 경제 전망 역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해야 하며 글로벌 경제의 구조와 실적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금융 이슈는 2011년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제 회복이 신용흐름이 아

럽의 수요 위축으로 인해 약간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4%가 넘는 성장이 예상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러한 성장 시나리오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괴롭혔던 심각한 거시경제적 불균형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브라질은 글로벌 금융 및 경제에 있어 주요 참여자로 자신들의 위치를 굳혔다. 브라질은 올해에도 7%, 내년에는 4%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간 브라질 정부가 펼쳐온 경제 정책은 많은 신흥경제국가의 벤치마킹 모델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브라질은 천연자원이나 반가공 제품들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행기, 자동차 부품과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바이오 에

글로벌 석학 2인의 2011년 세계 경제 전망

# ‘위기’ 타개 위한 ‘국제조율’ 필요

기한 문제들로 악화,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은행과 같은 중개자들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신뢰의 결여는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상당부분 없애버렸다. 또한 금융기관과 비 금융기업 간 신뢰도 아직 다 복구되지 않았다. 경제를 둘러싼 신용흐름 규모 역시 막 시작된 회복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지난 봄 유럽에서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금융기관 간 신뢰를 회복하고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데 이어 중앙은행이 실시한 추가 조치에도 여전히 유동성이 경제 전반에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흥국 성장세, 美·유럽·日 크게 웃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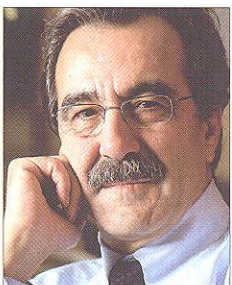
선진국들이 저성장, 만성적인 높은 실업률, 금융 변동성에 대처하고 있는 사이 신흥국은 글로벌 생산, 저축, 소비 부문에서 비중을 늘리며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11년 이후에도 미국, 유럽, 일본의 성장세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는 올해 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2011년에도 미국과 유

탄올과 같은 하이테크 제품도 수출하고 있다.

신흥경제국가 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신흥경제가 자족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이들 국가의 정부와 가계가 공히 지출을 늘려 내수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 경제가 최근 몇 년 간 거의 성장을 하지 않은데 비해 신흥경제국의 소매 판매는 2007년 초와 비교해 무려 60%나 증가했다.

## OECD국 투자 부진으로 힘겨운 한 해

반면 2011년은 미국, 일본, EU와 같은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자국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으로 인해 여전히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들의 성장률은 이 지역의 장기적 잠재성을 지속적으로 밀돌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불확실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또한 여러 선진국들은 2011년에도 은행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여 더욱 엄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부채 축소가 후속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금융 규제가 더욱 강해질수록 경제에 있어서 비 금융부분의 비용이 더 늘어남



에밀리오 온티베로스 교수

■ 에밀리오 온티베로스(Emilio Ontiveros) 스페인 UAM 기업경제학 교수(경제학 박사)는 AFI(Analistas Financieros Internacionales) 창립 자문 CEO, 스페인 상공부 자문위원과 지식개발재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 2009년부터 OECD 산하 라틴아메리카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되고 비 금융 기업의 투자에 대한 금융권의 파이낸싱은 더욱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제 회복 역시 기대 이하다. 가계 부채와 고용 성장의 실종은 성장의 핵심 조건인 내수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와 미연방준비제도(FED)는 만성적으로 높

약하고 중앙정부가 방어하고자 해도 속수 무책인 엔고 영향이 2011년에도 일본을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


유럽 경제 역시 독일의 경제의 선방에도 2011년에도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없이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세수 증대와 공공 부문의 지출 감축은 성장을 더욱 더

비롯한 다른 글로벌 포럼의 핵심 어젠더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가장 시급하게는 위기가 타 지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미 타격을 받은 경제권이 시급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 매뉴얼과 위기 대응 절차를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G20 정상회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협업 중심의 접근법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금융 리더십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임을 보여줬다.

### 中·신흥국 등 금융 역할 더욱 강화될 듯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단순히 이들 국가들의 경제 및 인구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이들의 영향력 때문이라도 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오는 11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해 각국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120인의 세계적 기업 CEO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 정상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다.

경제 성장과 무역수지, 국부는 여전히 전 세계에 불평등하게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낮추고자 하는 요구는 2011년 동안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환율과 투자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은 또 다른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글로벌 수준에서의 어젠더로 설정돼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을 통한 거시적 처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율과 서로에 대한 신뢰는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은 실업률과 수년째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주택 시장에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변수는 지속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1년 미국 정부의 가계 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정부와 FED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있어서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 거시경제 정책의 향방은 학계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행사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와 금융 역시 신호가 좋지 못하다. 이미 한 세기 이전에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뛰어난 수출 실적이 다른 경제 전반의 문제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년 간의 저성장과 금융 분야 소극성, 심각한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 회복도

디게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의 토대 마련이나 단기적 관점에서 현 상황의 타개 및 고용률 증대를 놓고 어디에 균형추를 맞춰야 할지 EU의 국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EU 전체의 GDP 성장은 1%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실업은 결코 감소하지 못할 것이다.

### 獨 선방에도 유럽은 온갖 문제에 봉착

2011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전히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IMF 조차도 현 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 기존 접근법이 적합한지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십 체계는 G20을